

(한국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

한총련의 낡은 정치이념과 학생운동의 '정권교체'

황 태 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민 주화의 견인차였고 희망이었던 한국 의 학생운동이 어느 시점부터가 '국민의 걱정거리'로 변하였다. 운동은 도덕성을 잃고 국가 정보기관 및 경찰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흔히 애용하는 폭력과 술수를 광신적 정치이념으로 정당화하는 정치적 '종말론 집단'으로 비치고 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들의 낡은 정치이념과 정치노선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변

화 발전하지 않는 낡은 정치이념과 노선을 고집하는 것은 변화된 현실과의 간극을 벌리는 것이다. 한총련 지도부는 자꾸 벌어지는 이 간극을 청년학도 특유의 현실초월적 관념성으로 무시하여 돌파하려 한다. 이 유치한 관념적 자세를 실천에 적용할 때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폭력 사용과 어른 정치인들을 뺀치는 권모술수와 부패한 운동자금 조달 비리는 다시 저 낡은 세계관적 이념으로 정당화된다.

한총련이 즐기치게 제기하고 견지해 온 중심테제는 민족문제이다. 남북은 한 민족이고 통일되어야 한다. 이 테제를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이 민족테제가 아니라

이 테제에 접근하는 정치이념과 노선인 것이다. 한총련은 이 테제를 제국주의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반제반미(反帝反美) 투쟁의 형식으로 달성하려 한다. 이 점이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노선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고, 이 관점에서 한총련은 북한 정권을 친근하게 생각하며 ‘근본주의적으로 민족적인’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할 것을 꿈꾼다.

그러나 이런 유의 민족적 근본주의(national fundamentalism)는 그간의 역사 속에서 오류로 입증되었다. 북한의 민족적 근본주의는 사회를 마비시킨 독약이 되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제3세계에서 이 노선을 걸었던 반서방 민족해방 노선의 국가들은 예외 없이 모두 무너졌다. 제국주의의 침습으로 붕괴한 것이 아니라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자멸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세계 학계에서는 근대화론의 타당성도 문제시하지만, 제국주의론의 반제민족해방 노선도 기각하였다.

이런 반성으로부터 생겨난 21세기형 지혜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약소국은 민족해방 투쟁을 통해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쟁취해야 하지만, 서방세계와의 단절이 아니라 이들과 ‘대결적 협력’을 견지함으로써만 서방으로부터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을 배우고 이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또한 이런 관점은 '60년대 남한을 앞질렀던 '주체사상'의 폐쇄적 북한이 붕괴상황에 처하고, 역으로 처음에 북한보다 뒤처졌지만 서방에 개방적인 남한은 결국 북한의 국력을 몇 곱절 앞지르게 된 역전 과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서방은 옛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제3세계 약소국의 빈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길이 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방은 반도

체 혁명과 연계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유전공학 기술 등 첨단기술 및 새로운 경영 혁신에 기초한 효율혁명적 생산방식의 내포적 축적(intensive accumulation)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 내포적 축적체제는 효율혁명을 통해 물자와 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산업공해를 축소시킨다. 이 덕택에 제3세계에 대한 서방의 자원 의존도는 지극히 낮아졌고 이로 인해 남북교역도 거의 소멸해 가고 있다. 제3세계의 수탈은 현재 자원공급, 자본투자, 상품시장 등 전 측면에서 서방의 경제발전에 대해 무의미하다. 가령 부수적으로 서방의 소비패턴과 취향은 제3세계 인민과 현격히 달라졌기 때문에 '맥도날드' 같은 인스턴트 회사도 국민소득 8,000달러 이하의 제3세계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서방이 제3세계를 호시탐탐 노리고 '제국주의적으로' 수탈한다는 테제는 낡은 것이 된 것이다.

고전적 제국주의론의 낡은 이념적 무기로는 제3세계에 대해 관심을 잃고 저들끼리의 G7 원탁회의나 OECD로 방향을 돌린 산업 국가들이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것을 비판할 길이 없다. 또한 낡은 제국주의론으로는 지구의 환경문제와 새로운 환경식민주의 현상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말하자면 제국주의론적 세계관은 21세기 문턱에서 붕괴되었고, 변화된 세상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정치이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한총련의 미(美)제국주의 개념은 이미 낡은 범주가 된 것이다.

2

여기에 더하여 한총련은 이미 낡아빠진

‘민족’ 개념을 견결히 고수하고 있다. 19세기에 발명된 ‘민족’이란 종래 위력적인 이념이었을지라도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 ‘민족’ 개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통일된 ‘민족국가’도 알고보면 그리 신성한 지존(至尊)의 이념이 아니다. ‘민족국가’ 이념은 엄격히 말해 근대국가가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의 근대국가에 대항하는 신(新)봉건적 반동국가의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혁명을 통해 근대국가를 건설하고 발전시킨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국민국가’(democratonation state)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데모스(지역시민집단)에 근간한 이 ‘국민국가’는 屬地主義的 원칙(ius soli)에 입각하여 종교, 혈통, 인종, 민족에 관계없이 자국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거주하거나 태어난 사람들에게 시민권(국적)을 부여한다. 즉, 국민국가는 그 헌정원리상 세계개방적이며 세계시민권(인권)과의 원리적 연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국민국가 이념으로부터 생성되는 ‘국민주의’(democratonationalism)는 국가의 민주화와 세계개방화를 촉진하는 민주적 에너지로 기능한다.

이에 반해 혈통집단(ethnos)에 근간을 둔 ‘민족국가’(ethnic nation state)는 애당초 프랑스의 혁명적 ‘국민국가’에 대항하는 독일 반(半)봉건적 제후국들의 정치적 낭만주의의 역사적 반동으로 생겨났고, 반봉건적 중동유럽 및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로만 확산되었다. ‘민족국가’는 시민권 부여에 대해 혈통주의 원칙(ius sanguinis)을 취하고 타민족에 대해 원리적으로 배타적이다. 이 ‘민족국가’ 이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생성된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는

시민권의 확장과 민주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독일 같은 강대국에서는 늘 대외침략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다.

민족주의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19~20세기에 서방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항하는 약소국들의 ‘저항적 민족주의’의 형식을 취했을 때뿐이다. 오늘날도 식민지 상황에 고통받는 동(東)티모르 같은 나라에서는 이 ‘저항적 민족주의’가 유력한 긍정적 에너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저항적 민족주의’와 ‘민족국가’ 이념은 얼마간 시대착오가 될 수가 있다. 남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완전 대등하지는 않지만, 북한 당국의 선전과 달리 결코 미국의 ‘식민지’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는 이미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국가간 관계에서 실질적 대등성과 상호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열위에 있는 나라를 모조리 ‘식민지’로 규정한다면, 미군이 주둔해 있고 또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주도를 대체로 추종하는 서유럽 나라들도 모두 미국의 식민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경제력이 우리보다 못한 포르투갈, 회랍 등은 영남 없이 미국의 ‘식민지’이고, 에이레는 영국의 ‘식민지’일 것이다.

따라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미제’를 몰아내고 남한을 해방하여 남북한을 통일하려는 한총련의 ‘민족적 원리주의’와 ‘통일 민족국가’ 이념은 시대착오에 속하는 것이다. 만사를 제치고 또 만사를 희생시키고서라도 ‘민족국가’ 이념을 달성하려는 정치적 지향은 일제시대처럼 암담한 식민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일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이 아니라 분단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는 민족통일에

접근하는 데 ‘민족’ 범주만을 절대시할 수 없는 것이다. 분단상황에서도 남한이 이른 경제발전과 민주화 업적의 보존도 통일에 있어 같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는 ‘세계화’의 조류를 타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 부여에 타민족, 타인종, 타혈통을 배제하는 북한과 남한의 ‘민족국가’는 중대한 변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남한의 헌정적(憲政的) 세계개방성과 세계 시민성(인권)의 수준은 반동적 ‘민족국가’ 모델을 수출한 독일보다도 낮은 상태이다. 남한은 ‘민족국가’의 원산지인 독일보다 더 폐쇄적인 ‘민족국가’인 것이다. 남한 ‘민족국가’는 19세기와 전전(戰前)의 독일 민족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핏줄’과 신화적 ‘단군묘’에 목매다는 북한은 남한보다 더하다.

3

21세기 국가이념인 ‘세계화’의 조류를 타기 위해서 남한에는 크고작은 입법조치를 통해 적어도 전후 ‘서구화된’ 독일 수준으로 ‘국민국가적’ 요소를 가미하는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가령 외국인의 귀화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한국 시민권과 세계시민권의 간극을 종전보다 좁혀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국가적 원리가 민주주의 및 인권이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근본주의적 민족 이념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경시하고 짓밟기 때문이다. 민족 범주를 절대시하는 한총련이 볼 때,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남한은

한총련이 국가경찰에 대해 폭력을 구사할 만큼 정치적으로 보다 관용적이고 보다 민주적인 반면, 북한은 근대 민주주의와 인권이념을 실질적으로 부정하고 짓밟는 나라이다. 한총련은 민족지존(至尊)의 논리에서 민주주의를 경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관점에서 상극의 위치에 있는 남북한을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균형 잡으려는 남한을 비방하고 민족지존의 논리를 펴는 북한을 찬양한다.

한총련은 남한의 초보적인 민주주의가 망가지더라도 통일이 오기만 하면 된다는 원리주의적 민족통일 이념을 끌어 안고 있다. 그러나 근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남한과 북한은 현격히 다른 나라이다. 남한은 그동안의 비약적인 산업화를 바탕으로 그리고 철저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북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민주적인 나라가 되었다. 이런 남한이 어떻게 북한과 같다는 말인가.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민족지존의 정조 속에서 한총련은 북한의 반민주성에 대한 비판을 완전히 망각한다. 이런 이유에서 한총련은 서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민주적인 남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반면, 폐쇄적이고 반민주적인 북한 당국은 찬양하고 추종하는 배리(背理)를 저지른다. 이런 이유에서 한총련의 친북적 통일론은 민족을 통일해야 할 이성적 이유도 결여하고 있다. 통일의 이유가 있다면, 과학적으로 따져 볼 때 아무 근거 없는 ‘단군자손의 배달민족’이라는 ‘신화적 이유’밖에 없다. 성급한 논객들이 ‘근대’를 넘어 ‘탈(脫)근대’를 노래하는 이때 우리가 신화에 따라 통일해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적 인

권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의 이성적 이유와 통일론자의 사명은 반민주적 김일성-김정일 지배체제로부터의 북한동포 해방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통일을 결합시키는 이념을 견지하는 정치집단은 당연히 북한 비판을 우회할 수 없다. 그러나 19세기의 '민족'과 '민족국가' 이념을 '국민'과 '국민국가'의 관점에서 수정, 갱신하지 않고 절대시하는 한총련은 북한체제의 반민주성에 대해서 무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 내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북한동포의 경제상황과 이산가족의 고통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도 도외시한다. 또한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한국 자본들이 동남아 각지에서 저지르는 고압적인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는다. 또한 '한 민족' 개념에만 사로잡힌 한총련은 같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같은 남한 사람들끼리 지역차별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한국의 현재 '주요모순'이 일찍이 민족모순에서 지역모순으로 바뀐 정국 변화에도 까막눈이 되었다. 한총련의 세계관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면, 민족통일과 관련하여 분단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이룬 제반 성과와 가치를 보존하고 키우는 방향의 통일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통일의 기회가 갑자기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한의 민주화와 산업화 기반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관점에서 통일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 기회가 오면 남한의 민주주의와 경제력 및 기타 역량을 희생해서라도 즉각 통일해야 한다는 '민족원리주의적' 주장은 오늘날 이념적으로 위험할 뿐더러 이런 이유에서 남한 국민의 지지를 얻

어낼 수 없다.

4

오늘날 우리에게 가능한 이성적 통일방안으로는 '민주적 평화통일'만이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해 '단군'이니 '배달민족'이니 하는 신화적 요소는 지존(至尊)이 아니라, 오용 없이 조심스럽게 전술적으로 활용해야 할 정신적 자산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원리주의적 '지존민족'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전술적 활용자산으로서의 '실용주의적' 민족개념만이 '민주적 평화통일' 이념과 부합된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운동권은 선배들의 학생운동과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부동의 이념적 기치로 내걸었던 민주주의 이념을 깊이 반추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국민국가적 개방성'의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을 해방하려는 이 '민주적 통일'의 입장에서 서면, 장차 통일의 주도권은 반민주적 북한이 아니라 그래도 보다 민주적인 남한에 있다. 남한 중심의 통일운동만이 이념적으로 올바르고 또 현실적인 것이다. 따라서 남한을 좀 더 민주적·국민국가적 면모로 개혁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총련의 통일운동은 케케묵은 반제(反帝) 민족지존의 관점에서 북한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정치노선을 걸고 있다. 이 정치노선은 민주이념의 관점에서 올바르지 않고, 따라서 국민적 지지도 얻지 못한다. 이 정치노선이 남한 국민과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국민으로부터 더욱 더 고립당하는 한총련은 이 괴리를 폭력행사의 강도와 빈

도를 높여 돌파하려 한다. 이럴수록 한총련은 민족지존의 이념을 무반성적으로 맹신하는 친북 좌경폭력세력으로 낙인찍힌다. 국가 정보기관과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한총련을 국민의 지지를 업고 더욱 강박하고, 그리하여 한총련은 더욱 폭력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총련 핵심부가 신성시하는 민족지존의 반제(反帝) 논리는 종말론자들의 교리처럼 학자들의 설득이나 경찰의 강압으로 해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학생운동을 시대착오의 세계관과 정치노선으로부터 구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썩은 정치의 해결책과 마찬가지로 아마 한총련 안에서 야당적 위치에 있

는 이성적인 진보집단들이 운동의 중심권력을 쟁취하는 학생운동의 '정권교체'일 것이다. ■

황태연/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원, 한겨레신문 프랑크푸르트 통신원 등을 지내고, 현재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정치연구회 부회장, 한독사회과학회 연구이사, 한국정치사상연구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과학기술 혁명시대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포스트 사회론과 비판이론』, 『지배와 이성』, 『지역패권의 나라』 등이 있다.